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00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의원 발의)		
발의자	이현숙의원	발의연월일	2019. 04. 25.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 경 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생활임금 산출시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의 최신 지표를 반영하고, 타자치구 생활임금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의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변경

2. 주요내용

- 생활임금 고시일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안 제7조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최저임금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사전협의 : ‘일자리과’와 사전협의 마침

II. 검토 의견

1. 조례 개정의 배경

-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1986.12.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였으며 사용자에게는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왔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으로는 생계 유지 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하한선 설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인 생활임금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으로 정의되며, 2014년부터 노원구와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표1>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임금 조례의 운용 현황을 살펴 보면, 2019년도 생활임금액은 노원구가 가장 낮은 8,980원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성동구, 광진구 등 7개 자치구가 가장 높은 10,148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서초구의 생활임금액은 10,040원으로서 25개 자치구 평균 생활임금액은 9,989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종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의 생활임금액은 자치구 평균 생활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기한을 살펴보면 광진구, 동대문구 등 12개 자치구가 12.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종로·용산구 등 7개 자치구는 9.10일까지, 서대문·금천구 등 4개 자치구는 9.30일까지, 서초구와 구로구가 9.15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25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표1> 서울시 및 자치구별 생활임금 운용 현황

연번	자치구	조례 제정일	2019년도 생활임금액 (최저임금 8,350원)	고시 기한	'19년 고시일
1	서울시	2015. 1. 2.	10,148	12.31한	10. 1
2	종로구	2015.12.31.	9,428	9.10한	9.10
3	중 구	2014.12.31.	9,976	9.10한	10.10
4	용산구	2015. 8. 7.	10,140	9.10한	10. 1
5	성동구	2015. 5.21.	10,148	9.10한	10.11
6	광진구	2015. 7.10.	10,148	12.31한	10.29
7	동대문구	2015. 7.30.	10,148	12.31한	10.31
8	중랑구	2017. 9. 8.	9,900(시행첫해)	9.10한	11.22
9	성북구	2014. 9.11.	10,113	9.10한	10.10
10	강북구	2015.11. 6.	10,148	12.31한	11. 9
11	도봉구	2015. 3.12.	10,041	12.31한	10.16
12	노원구	2014. 8.18.	8,980	12.31한	10. 8
13	은평구	2015. 5. 7.	10,000	12.31한	10.16
14	서대문구	2015. 4.15.	10,000	9.30한	9.28
15	마포구	2015. 7.23.	10,148	12.31한	10.18
16	양천구	2015.10.30.	9,936	12.31한	10.11
17	강서구	2015.12.30.	10,040	12.31한	11.21
18	구로구	2015. 3.26.	9,980	9.15한	9.17
19	금천구	2015.10. 8.	9,934	9.30한	10. 1
20	영등포구	2015. 9.24.	10,148	9.30한	11. 8

연번	자치구	조례 제정일	2019년도 생활임금액 (최저임금 8,350원)	고시 기한	'19년 고시일
21	동작구	2015. 2.26.	10,148	12.31한	10.15
22	관악구	2015. 7.30.	10,042	12.31한	10.23
23	서초구	2016.12.22.	10,040	9.15한	10. 2
24	강남구	2018. 6. 1.	9,990(시행첫해)	9.30한	
25	송파구	2015.12.28.	10,000	9.10한	10.18
26	강동구	2016. 6.17.	10,140	12.31한	11. 7

2. 주요 개정 내용

○ 생활임금 고시기한 변경(안 제7조제3항)

- 생활임금 고시기한을 “매년 9월 15일까지” 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로 변경하였음.
-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임금의 결정 및 고시기한은 25개 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결정 및 고시하고 있으나,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을 참고할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생활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